

기업 대금체불 1300조 육박... '삼각부채' 문제 다시오나

● 차이나 뉴스&리포트

3년간 '제로 코로나'에 재무 악화 "대금결제기간 평균 20일 늘어나 결제 미루고 현금보유, 갈수록 악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민간기업들이 연쇄 대금 체불의 늪에 빠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속에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채무부담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됐다. 쌓인 대금 체불 규모만도 1300조원에 달한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내외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30년 전 중국 경제를 흔들었던 '삼각부채'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삼각부채란 쌓인 재고에 신규 수요 감소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서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은행에는 대출이 연체되는 상황을 말한다.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불량 채무는



중국 베이징의 비즈니스 중점 지구로 사람들이 걷고 있다. 국내외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30년 전 중국 경제를 흔들었던 '삼각부채'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AP·뉴스시스

전체 금융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중국에선 1990년대 초반 긴축을 단행하면서 삼각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은행 전체 대출의 3분의 1이 부실 위기를 맞았다.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프라 투자 등에 500억위안 이상

을 쏟아부어야 했다.

중국은행(BOC)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중국 전역의 대금 체불은 6조7000억위안(한화 약 1290조원)을 넘어섰으며 중소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중국 미상환 대출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광동성의 한 산업용인쇄 업체 관계자는 "대금결제 기간이 작년보다 평균 20일 정도는 늘어났다"며 "기업들은 결제를 미루고 일단 최대한 현금을 보유해 운영을 하고 있어 연쇄 대금 체불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

면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 가운데 83% 이상이 작년 4분기 판매한 상품에 대해 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43%는 올해 1분기 매출채권의 기간이 작년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공산당 최고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이 직면한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국무원 야오징위안 특별연구원은 "많은 기업이 지난해 생산한 제품을 팔지 못해 재고가 늘었고, 이는 다시 상호 대금체불로 이어져 소위 삼각부채 문제로 불거졌다"며 "부진한 해외 수요는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투자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반면 민간 부문은 0.6% 증가에 그쳤다. 민간 기업의 이익은 1분기 2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덧칠정책' 반복... 정부·정치 개혁해 국가 생산성 높여야"

중기중앙회-전경련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중소기업·한국 경제 활력위해 노동시장 개혁 절실한 상황"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 문제 해결없이 매번 성급하게 반복되는 '덧칠 대책'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 경험이나 해외 사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치밀한 준비없이 금융, 세제, 조달 등 온갖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뚜렷한 성과없이 국가자원만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는 결국 정책 사업수 증가, 예산 증가, 조세부담 증가, 국가부채 증가, 공무원 인력 증가 등 곳곳에서 '빨간불'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초중고등교육 개혁 ▲대·중소기업 정책 전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개막 행사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환 ▲정부 개혁에 '올인'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시급히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내용은 '제3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가 개막행사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위원장이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나왔다.

고 부원장은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칠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부원장은 정치권은 '갈등 조정' 보단 '갈등 조정'에 앞장서고, 정부는 해묵은 정책을 반복하며 역량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은 정부 지원·보호 수혜자, 대기업·중소기업, 교수·교사, 노동조합, 공공부문 등 기득권의 반발로 더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다만,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

하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묶어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세제 경쟁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자리엔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토론회로 막을 올린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고 부원장의 주제발표 후에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허준영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승호 기자 bada@

ICT 수출 127.7억 달러, 10개월 연속 줄어

산업부, 지난달 무역수지 23.3억 달러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출액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회복 지연에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ICT 수출은 127억7000만달러, 수입은 104억4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3억3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CT 수요 회복 지연, 반도체 업황

부진, 역대 4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전년 동월(199.3억달러)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9% 급감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40.5%), 디스플레이(-30.5%), 휴대폰(-41.6%), 컴퓨터·주변기기(-66.7%), 통신장비(-14.7%) 등이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업황 부진에 따른 출하 감소, 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시스템(-22.1%), 메모리(-54.1%) 수출이 동시 감소했고, 디스플레이는 전방기기

수요 둔화로 인한 OLED(-21.6%) 및 국내 생산 축소 영향으로 LCD(-43.9%)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휴대폰은 글로벌 기기 수요 둔화에 따른 완제품(-42.3%) 감소와 부품 수요 둔화에 따른 부분품(-41.2%) 감소세가 지속됐고, 컴퓨터·주변기기는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기역장치 수출이 -79.9% 급감했다.

통신장비의 경우 인도(+380.3%) 등 5G 통신 인프라가 확대되는 지역은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전체 통신장비 수출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부채 상위 50%청년 연간소비 26.4만원 ↓

>> 1면 '금리인상 세대별'서 계속

이렇게 증가한 대출금은 금리인상과 맞물려 청년들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부채 상위 50%에 속하는 청년의 연간소비는 26만4000원 감소하는 반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의 연간소비 감소폭은 2만4000원에 그쳤다.

부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금리상승에 따라 저축을 통해 이자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금

리상승에 따른 이자와 원리금상환부담까지 더해져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보다 대출수요가 높은 청년층의 경우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수혜층이 제한되고 효과성이 높지 않으므로, 청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청년들의 경우 근로기간이 오래 남았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